

진상조사 원년...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재거론 주목

문 대통령 5·18 40주년 기념사 메시지 될 답나

국정원 등 정부 기관들에게도 적극적 노력 주문할 듯
광주 대동정신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열기 언급 전망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40년이 되도록 아직도 발표 명령자는 물론 희생자 암매장, 계엄군 성폭행 등 당시의 참혹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두 차례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을 찾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한 '5월 정신' 계승은 물론 강력한 진상 조사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어 40주년을 맞은 지역 민심의 기대는 더욱 크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 숨겨진 열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가 하면, 80년 5월 당시 아버지를 잃은 5·18들이 유가족을 안아주면서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와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 광주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어

참석했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 학살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행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고 이를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진상 규명 측면에서 내용을 만든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철저한 진상 조사의 원년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던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슈퍼 여당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각종 법적인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오는 17일 5·18 왜곡 처벌법은 물론 5·18 진상조사 특

별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미래한국당에 막혀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공동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또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5·18 진상 규명 노력도 천명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5·18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 기관들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80년 광주정신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는다는 전망도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치유와 화해의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80년 광주의 대동정신을 참여와 연대의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나서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다시 거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언급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상 처음으로 5·18 기념식이 국립묘지가 아닌 5월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치러지고 여야 정치권이 모두 참석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코로나 19 국면에서 처리되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국민대동



문대통령 "청년 스타트업 발굴" 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강남구 나리키움 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자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찾았다면 헌정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재임 중 3번째 참석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미국이 건넨 5·18 비밀문서 '결정적 한방' 없었다

발포 명령·암매장 등 새로운 사실 없어
신규 문서도...한·미공조 이어져야

미국 정부가 지난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 일부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 진상 규명의 새로운 문을 여는 '결정적 한 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5·18 유관 단체 전문가들과 미국 정부가 최근 제공한 문서를 분석한 결과, 계엄군의 발포 명령과 희생자 암매장, 헬기 기관총 난사 등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은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새로운 문서들도 이번엔 10여 페이지 공개됐지만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거 미국 측이 공개한 문서에서 삭제되거나 가려진 부분이 공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과 군부 세력의 움직임 등이 더욱 세밀히 조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미국 측이 추가로 비밀 해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건넨 기록물은 총 43건, 140쪽 분량이며 주한 미 대사관이 지난 1979년 1월~1980년 12월까지 미국 국무부에 보낸 전문 등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 측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민감한 부분은 한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을 중심

으로 한 군부의 광주 무력 진압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용인하면서 80년 5월 이후, 반미 감정이 크게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추가적인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문서 제공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한미공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는 4000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무부를 제외하고도 미국 정부의 각종 정보 기관이 갖고 있는 문서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진상 규명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이번 한미 정부의 공조는 그 의미가 크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한미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15일 미국 정부 측이 제공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14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12명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총리, 5·18 유공자 오찬...“진실규명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12명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14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다졌다.

정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인 지금 우리 사회는 연대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과 국가역량을 결집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난 12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 것은 국민 화합의 길로 나아가갈 물꼬를 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행사들이 축소 개최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5월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고 민주 유공자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5·18 유공자와 유가족들은 이날 정 총리에게 ▲5·18정신 헌법전문에 명시 ▲5·18단체의 공법단체 등록을 위한 입법준비 지원 ▲진상규명위원회 강제 수사권 부여 특별법 개정 ▲5·18 유공자 생활 실태 전수조사에 필요한 재정지원 ▲5·18보상법과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5·18외국과 범행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5·18당시 구속자 배상시효 연장 등을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발포명령자 반드시 밝혀져야"

이용빈 민주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인) 원내부대표는 14일 열린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5·18 40주년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관련해 "발포명령자와 미완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5·18 4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5·18의 화두는 진실규명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5·18의 공동체정신은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가치가 됐지만, 정작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지 못한 민족에게 정의는 없을 것이다"며 "5·18의 참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 그동안 부조리한 권력에 의해 진실이 가려졌던 어두운 현대사를 하나씩 바로 잡아야 하고 더 이상 국가폭력에 맞서 싸웠거나 무참히 희생했던 시대의 비극이 개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겨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5·18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작년 말에 출범했고, 지난 12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진상조사위원회들과 조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은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